

# 교육의 普遍化와 高等教育 기회의 民主化

韓 駿 相

(延世大 教育學科)

## 1. 머리말

民主化란 민주주의를 향한 社會運動의 여러 활동과 절차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教育의 民主化란 결국 教育 부문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教育社會 指向의 社會문화 운동의 절차 및 각종 활동들을 지칭하게 된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노력은 너무 다양해 하나로 정의될 수 없지만, 이러한 운동을 통해 나타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민주주의란 政治的 理念이나 制度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념과 제도적 정비 못지않게 제도화된 문화 구조가 얼마나 민주주의적인가를 파악할 때 그 실체가 보다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정치적으로 규정되는 민주주의의 실체 및 이념이 문자상으로 그 아무리 완전하게 제시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상 생활에 표출시키는 사람들의 사회·문화적 태도가 민주주의의 精神과 實踐에 어긋나고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일 수밖에 없다.

과연 교육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인 태도와 감정이 교육의 민주화를 느낄 만큼 민주적인가? 특히 大學教育의 機會 擴大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들은 교육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어 있는가?

## 2. 高等教育과 民主的 生活態度

교육 부문에서의 민주주의적 생활 양식, 즉 민주주의가 교육 부문과 일상 생활 속에 정착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민주주의적 생활 양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合理的 經驗主義, 즉 인간의 이성으로 자기가 경험하는 지식을 해석하고 응용함으로써 독단론을 배격하는 생활 태도가 될 것이다. 둘째는 자발적인 共同體 參與意識으로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의 주체가 되어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며 그것을 원활히 전개하는 태도일 것이다. 셋째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하기보다는 자기의 관점과 다른 사람 역시 그의 이성에 따라 자유롭게 살 수 있음을 인정하며, 더 나아가 그것을 고취시킬 수 있는 독립적이고도 자율적인 自己意識의 涵養이 민주주의적 생활 태도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적 생활 양식에서 중요한 것은 토론과 더불어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하는 合議精神의 高揚과 實踐이다. 즉, 각 개인의 이해 관계를 조정·합의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갈등을 설득·이해함으로써 하나의 답을 얻어내는 합의 정신이 민주주의적 생활 태도의 근간을 이룬다.

이러한 민주적 생활 태도는 家庭教育을 통해서 또는 社會教育을 통해서도 길러질 수 있다.

민주적 생활 태도의 육성이 가정교육이나 사회교육에 의해서도 충분히 길러질 수 있지만, 이것이 더욱더 공고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體系化된 學校教育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학교 교육은 다른 교육보다도 민주적 생활 태도를 더욱더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제도화된 교육 기관이다. 이것은 실제로 일상 생활 속에서 민주적 생활 태도를 교육받은 사람들과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간에는 큰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더욱더 분명한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민주주의가 미숙한 나라일수록 학교 교육에 부여된 民主文化 養成의 課題가 보다 크게 부각되곤 한다.

일반적으로 민주 시민의 생활 태도를 기르기 위해 학교는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한다. 물론 제시된 민주 시민의 생활 태도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학교가 비효율적인 면도 있다는 지적은 별도의 문제 제기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적 생활 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는 市民的 要求와 그것을 향한 實踐的 活動만큼은 정당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학교는 民主主義 實現에 관계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첫째, 학교 교육은 국민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에 관계된 政治的 知識과 關心을 증대시키고 있다. 둘째, 학교는 민주주의 생활 태도에 관련된 政治的 對話의 기술과 방법을 익혀 주고 있다. 셋째, 학교는 개인의 민주주의적 생활 태도가 개인의 政治生活에 직결된다는 것도 익혀 주고 있다. 넷째, 학교는 기존의 정치 체제가 갖는 장점과 문제점을 가르쳐 줌으로써 민주주의의 현실과 이상을 가르쳐 주고 있다. 다섯째, 학교는 民主市民的 參與의 節次와 共同體 規範들을 가르침으로써 서로 더불어 사는 것이 민주주의 생활 태도의 기본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여섯째, 학교는 人權의 尊嚴性과 市民的 寬容性의 중요성을 가르쳐 줌으로써 인간에 대한 自由市民的 理解를 신장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는 후진국이나 선진국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회 발전 수준이나 경제적 발전 수준에 따라 민주주의적 생활 태도에 대한 이해와 그것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다름을 예시함으로써 민주주의적 생활 태도에 대한 상대주의적 가치를 이해시키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적 생활 태도는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가르쳐지는 내용과 형식은 다르지만, 일관되게 강조되는 것들이다. 교육의 발달 단계상 高等教育은 민주적 생활 태도 양성의 마지막 단계이며, 민주적 생활 태도가 구체적으로 결실을 맺는 높은 단계의 教育的 秩序이며 教育의 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教育現實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학교와 중학교 때 보여졌던 민주주의적 생활 태도에 비해 대학 생활에서 포출되는 민주주의 생활 태도는 한결 질이 떨어지고 있다. 학생들의 정치적 지식은 풍부하되, 그 지식은 편견과 편향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 정치적 대화는 끈질기나,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기교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적인 정치 참여는 있으되, 그것은 정치적 조작과 선동의 희생물로 끝나고 있다. 토론은 활발하나, 그것의 결론은 정치적 매도로 일관되어 있다. 게다가 개인 인권의 존엄은 강조되나, 입바른 말에 지나지 않은 채 폭력 속에서 유린되고 있을 뿐이다. 민주주의를 가장 많이 외치는 대학 사회일수록 그 대학은 가장 비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화의 중요성을 절규하는 대학일수록 그 조직 구성원은 대화의 단절을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모순이 비일비재하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비민주주의적인 사회가 바로 大學社會이고 學校社會이며, 對話의 風土가 가장 척박한 조직이 바로 敎職社會라는 社會的 汚名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주화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대학 사회가 왜 非民主的 社會라고 낙인 받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필요 이상의 特權意識, 즉 엘리티시즘을 누리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 엘리티시즘은 知識分配의 不平等 현상을 야기시켰고, 그 결과 大學教育 機會의 閉鎖性은 이 사회를 문화적으로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더욱더 불평등한 사회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지식 분배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은 여러 가지 사실에서도 분명해진다. 대학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더욱더 외국어를 배울 수 있고,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더욱더 외국의 문물을 직수입하여 자기 이

해를 도모하는 식으로 지식 분배의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富의 불평등한 분배가 이 사회를 불평등한 사회로 만들어 가는 단초가 된다면, 知識의 불평등한 분배는 이 사회를 불평등한 사회로 안착시키는 응고제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지식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민주사회와 민주적 생활 태도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은 더욱더 어렵게만 될 것이다.

### 3. 知識分配의 不平等現象과 高等教育機會의 民主化

교육의 민주화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에게 대학교육의 기회가 보편화되어야 한다. 大學教育機會의 普遍化는 지식 분배 불평등의 문제 고리를 끊어 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한국의 文教政策史는 大學入試 問題解決史라고 볼만큼 대학 입시가 한국 교육 문제의 핵이 되어왔다. 대학 입시는 지식 분배의 불평등을 가속화시켰다. 그 결과 지식 분배의 불평등은 고등교육 기회의 제도적 제약으로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 특히 入試制度는 학생 개인의 대학 진학 여부를 개인 능력의 차이라고 판정해 버림으로써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학 입시는 지식 분배 불평등의 제도적 보호 장치로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겠다.

결국 지식 분배 불평등의 제도화는 한국 교육의 3대 문제 고리인 교육의 階層化 현상, 敎育課程의 파행적 운영, 그리고 학생 精神健康의 피폐화를 구조적으로 강화시키는 교육 문제의 근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 분배 불평등의 제도적 모순이 해소되지 않은 교육의 민주화는 허구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마저 가능하다. 이 결론에 따르면, 지식 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의 기회, 특히 高等教育 기회는 擴張되어야 한다. 고등교육 기회의 보편화는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전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학습자 개인의 학습 결손 때문

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대학 입시에 낙방했기 때문에 자살을 해도 무방하다고 목인하거나 그러한 사회적 모순에 대해 뜨겁게 침묵하는 사람들은 大學의 使命에 대해 여러 가지 신화와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과 비슷하다. 이러한 사람들은 지식 분배 불평등의 정당성을 절규하는 사람들과 같다.

고등교육 기회는 지적 능력이 있는 소수에게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고등교육 기회의 개방화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 결국 이러한 반대 논리는 대학교육의 신화를 낳게 만든다.

이들은 대학은 學問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문이 가능한 사람에게만 대학이 개방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고등교육 기회 제한의 타당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대학교육을 소수가 독점하기 위한 회귀재로 우상화시킴으로써 大學은 象牙塔이어야 한다는 傳統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이 학문하는 고등교육 기관이라는 점에는 반론이 있을 수 없지만, 그 학문의 결과가 장식품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즉, 대학을 소수인의 문화적 신분이나 교양의 지표로 쓰기 위한 社會的 道具로 활용한다면 그것은 엘리트주의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에 집착하는 사람들에 의해 오늘의 대학교육은 회생 당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가 다가올 미래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이 갖는 學問의 術學性보다는 고등교육이 갖는 學問의 實用性에 더욱더 주목해야 한다. 물론 이 두 가지는 대학이 理論追求와 現實應用이라는 측면에서 같은 값어치로 강조해야 할 것으로서 다같이 존중받아야 한다.

다가올 21 세기는 인간의 전 생애가 敎育과 學習의 연속이라는 관점이 강조될 것이므로 대학교육도 개인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하나의 학습 단계로 인식될 뿐이다. 즉, 대학교육은 누구든지 거쳐야 될 교육의 한 단계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대학교육은 더 이상 特權이 될 수 없기에 21 세기에 있어서 대학교육 그 자체는 단절형 교육 형식으로서 성공적인 사회 적응을 위해 유일하게 중요한 교육은 결코 아니다.

한 개인이 평생 동안 벌어들이는 전체 수입 가운데 학교 교육이 기여하는 비율은 겨우 15% 미만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대학교육 자체가 공헌하는 비율은 10% 미만이고, 나머지 80%는 사회교육이나 기업교육 등에서 이루어지는 自己開發 學習에 의해 결정된다. 대학교수, 변호사, 의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라 할지라도 전문가로서 지속적인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문 분야에서의 再教育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재교육을 계속 받지 않으면 혁신성과 창신성이 결여된 채 현실에 안주하며, 잘못된 기존의 가치 체계를 맹목적으로 고수하려는 성향이 크게 나타난다고 하는 연구 결과는 高等教育 기회의 日常化가 갖는 교육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부각시켜 준다.

더구나 대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식을 어느 정도 신속하게 수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고등교육 기관이라면, 대학교육은 소수에게만 개방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사실 인간의 지식은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해 왔다. 18세기에 인간이 만들어 낸 지식은 紀元 元년에 비해 2배나 되었고, 20세기의 지식 총량은 다시 18세기 지식 총량의 2배가 되었다. 또한 20세기의 분기점인 1950년에는 다시 2배, 이어 1960년에는 또다시 1950년대 지식 총량의 2배로 늘어났다. 게다가 구텐베르크에 의해 인쇄술이 발명된 1450년부터 1950년까지 500년 동안 만들어 냈던 도서의 총수는 1960년대에 25년간 만들어 낸 책 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인간의 知識創出의 속도 못지않게 知識의 廢棄 현상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지식의 증가와 지식의 폐기 현상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동시에 개인의 성공적인 사회 적응을 위해서라도 고등교육 기회는 어떤 식으로든 다음의 세 가지 추세로 그 방향을 새롭게 잡을 수밖에 없다. 즉, 규모의 대형화·교육 내용의 다양화·교육 행정의 자율화 추세로 대학교육의 기회가 대중화되어 갈 수밖에 없다. 결국 大學教育의 日常化, 더 나아가 전 국민에 대한 고등교육 의무화 추세는 피할 수 없는 사회 현상이다. 高等教育의 義務化 추세는 소

득에 따른 知識 分배의 獨占 현상으로 비롯되는 社會的 葛藤을 예방하는 효과와 教育의 民主化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 4. 高等教育의 普遍化와 學位 價値의 社會的 平準化

대학교육을 엘리트의 지식 충전소로 간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가 學歷의 인플레이션을 촉진시킨다고 주장하면서 대학교육 기회의 보편화를 반대한다. 동시에 이들은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대학교육의 기회는 제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에는 한국 대학교육의 質이 그동안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 정책으로 저하되었다는 내용과, 한국 사회에서 고등교육 기회는 이제 대중화 단계를 넘어 섰다는 내용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 일부 학자들은 고등교육 기회의 성숙 단계를 3단계로 나누면서 고등교육 취학률이 15% 미만이면 그것은 고등교육의 엘리트 단계, 50% 미만이면 고등교육의 대중화 단계, 그리고 50% 이상이면 고등교육의 보편화 단계로 규정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사회과학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세계 각국의 고등교육 기회를 판단한다면, 전 국민의 지식인화를 주장하는 北韓같은 나라는 고등교육의 보편화가 이루어진 理想 國家라는 결론에 도달하며, 반대로 蘇聯같은 나라는 아직도 고등교육의 엘리트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해괴한 판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고등교육 기회의 단계론적 지표가 갖는 사회과학적 해석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위와 같은 분류 기준을 활용한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대중화 단계에 와 있다고 단언해야 한다. 위의 <표 1>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취학률은 거의 33%에 달함으로써 일부 학자들이 말한 고등교육의 대중화 단계에 이르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한국의 고등교육 취학률은 영국이나 서독 혹은 일본을 앞지르고 있다고까지 보아야 한다면, 한국의 고등교육 기회는 보편화 단계에

〈표 1〉 고등교육 발전 지표의 국제 비교(인구 1,000 명당 고등교육 인구) (단위: 명)

구 분	1980	1981	1982	1983	1985	1988
한 국	16.1	20.3	24.0	26.9	31.6	32.9
일 본	18.7	18.4	18.3	18.3	32.0	32.5
미 국	31.2	31.2	31.1	31.0	40.0	
영 국	—	9.0	9.2	9.5	19.2	
프 랑스	19.2	19.8	20.4	20.9	27.4	
서 독	13.9	13.9	13.8	13.5	31.0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1986.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문부성, 교육지표의 국제비교, 198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 통계자료집, 1986, 1988.

이르렀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각 정부 기관에서 보고한 통계치에 대한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고등교육의 기회를 전문대학 정도로 제한시켜서 보고한 곳도 있고, 4년제 대학으로 국한시켜 보고한 국가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전문대학 수준까지 포함시켜 고등교

〈표 2〉 고등교육 기관과 유형별 구성비(1988) (단위: %)

구 분	전 문 대 학	4년제 대학 학생 비율	4년제 대학 학생 비율
에 니오 피 아		43.4	55.6
네 팔		71.4	25.3
세 네 갈		62.0	33.1
캐 나		58.3	34.6
프 랑스		16.1	71.5
서 독		13.8	84.7
캐 나 다		19.6	72.3
일 본		17.9	79.0
한 국		19.2	73.7

〈표 3〉 세계 주요 대학의 교육 지표 비교

구 분	학생 수 (명)	교원 수 (명)	교수 1인 당 학생 수(명)	도서 수 (만권)	학생 1인 당 도서 수(권)	학생 1인 당 경비 (만원)	학생당 경비: 서울대 대비	총 예산: 서울대 대비
서 울 대	28,000	1,300	21.5	134	48	293	1.0	1.0
등 경 대	20,546	2,288	9.0	609	296	2,952	10.1	7.4
우 스 포 드 대	13,500	1,408	9.6	800	593	1,434	4.9	2.4
아 헨 대	34,638	3,115	11.1	—	—	1,034	3.5	4.4
일 리 노 이 대	34,447	2,676	12.9	719	209	1,219	4.2	5.1

\*자료: 조완규, “대학재정위기관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재원의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1990)를 수정했음.

육의 기회 확대를 재해석하면 선진국의 고등교육 취학률은 거의 60% 이상을 기록하게 된다.

이러한 것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온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가 갖는 몇 가지 속성, 즉 최근의 통계치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를 사회 민주화와 국가 발전 정도에 견주어 말한다면 크게 두 가지 속성이 나타난다.

첫째로 경제성장률이 낮은 나라, 말하자면 파키스탄(1.9%), 니제르(0.1%) 등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높은 나라(미국 32.2%, 뉴질랜드 30.6%) 국민의 고등교육 학력 구성비가 높다는 점, 둘째로 경제 성장이 더딘 나라일수록 전문대학 학생 비율이 4년제 대학 학생 비율보다 높다는 점이 크게 부각된다(〈표 2〉 참조).

한마디로 후기 산업 사회의 속성을 드러내 보이는 나라일수록 고등교육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나라일수록 교육의 민주화가 안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실제로 이들 나라는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크게 강조하고 있다. 과연 이런 나라들이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보는 듯한 악성적인 학력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는가? 또한 고등교육 인구 증가는 학력의 인플레이션과 고등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원인인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 단순히 고등교육 인구의 증가 현상만을 지적하는 것은 사회과학적인 타당성을 결여하게 된다. 왜냐하면 학력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고등교육 기관에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으며, 대학교육의 사회적 유용성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보장받고 있는지는 질문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 인구의 증가에 따른 교육 지원 계획이 부실하다면, 그것은 당연히 고등교육의 질을 떨어지게 만들 것이다. 동시에 대학의 사회적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회 제도 속에서의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 역시 학력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다. 사실 고등교육 인구의 증가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은 외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대학교육의 지원 정책 역시 서구에 비해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표 3〉참고).

한국에서 국가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서울대라 할지라도 교육 자원과 지원 체계는 일본의 동경대나 영국의 옥스포드대, 독일의 아헨대, 미국의 일리노이대에 비해 형편 없이 낙후되어 있다. 결국 사교육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 고등교육의 경우, 단순히 고등교육 기회의 증가 현상만을 고등교육 질 저하의 원인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육성을 요구하는 일종의 심정적인 고언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오히려 고등교육의 기회가 더욱더 일상화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엘리트 중심 사회에서 통용되던 필요 이상의 '學位價値'가 평준화되어야 한다. 학위 그 자체는 사회적 출세의 기준이 되기보다는 훈련의 기본 증표로서 족하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돋보여 주는 지식, 태도, 그리고 기술이 사회적 인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기술 개발의 최대 장애가 기술 인력의 부족에 있다는 신문 보도는 고등교육의 기회가 능력 본위로 선택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한마디로 高等教育 기회의 普遍化는 인간의 능력이 인정받는 能力 본위 사회를 필요로 한다. 능력 본위 사회가 더욱더 정착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기회의 일상화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대학교육의 질 개선이 더욱더 필요하다.

## 5. 高等教育 機會의 普遍化와 高等教育 質 改善

고등교육의 보편화가 실질적으로 이 사회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즉 고등교육의 기회가 개방되어 교육의 민주화가 더욱더 다져지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大學教育의 革新이 요구된다.

첫째, 대학 선발 및 입시에 있어서 開放化가 요구된다. 또한 전학, 복학 등의 제도가 21세기 산업 구조에 맞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성인 학습자와 취업자들에게도 대학교육의 기회가 개방되어야 한다. 대학이 스스로 학문적 수월성을 지키는 것과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 문제는 초점이 다른 별개의 문제이다.

둘째, 대학교육은 학자 중심의 연구 기능 못지않게 교양교육과 기능교육에 대한 敎育과 訓練 기능, 그리고 이에 관한 실용적 연구 및 산·학 협동 중심의 社會奉仕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회 현실에 토대를 둔 이론 형성과 이론에 토대를 둔 현장 응용이 더욱더 요구된다.

셋째, 대학에서의 學生 相談 체계가 보다 더 학생 위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행해 온 진로 지도나 직업 소개 정도의 수준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就業 대책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새로운 직종 개발이나 산·학 협동에 의한 구체적인 취업 대책을 마련하는 식으로 학생 지도 및 상담 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넷째, 敎授方法의 革新이 필요하다. 단순한 집단 강의 위주에서 벗어나 실기와 연습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 전자공학과 컴퓨터, 비디오를 이용한 새로운 강의법, 말하자면 텔레비디오 등을 이용한 전천후 학습과 더불어 산·학 협동 훈련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卒業 중심의 大學 學事管理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즉, 입학·선발 중심의 대학 운영에서 벗어나 누구든지 대학에 들어올 수는 있으나, 졸업만큼은 개인의 능력 발휘에 따라 결정되도록 졸업 중심 학사 관리 체계를 구체화시켜야 한다. 이는 졸업정원제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能力卒業制와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여섯째, 企業體 부설 대학의 運營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들에게 학위를 줄 수 있는 學位認定制度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獨學에 의한 學士學位 운영 제도와 병행하여 기업체 부설 대학의 운영은 고등교육 기회의 일상화를 앞당겨 줄 것이다.

일곱째, 학생의 學習指導가 보다 학생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 대학교육 기회의 일상화는 학생 인구의 多樣化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다양한 학습 지도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보편화되면, 학생들의 취업 기회가 넓어지게 되고 그에 따른 개인 문제도 다양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의 동기나 학습 의욕,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독서 능력 등이 문제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러한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학습 의욕과 학습 동기의 고양을 위한 학생 지도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노력들은 大學教育 기회의 日常化를 촉진하는 일이며, 아울러 敎育의 民主化를 교육 부문에서 일상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